

1991년 11월 26일 제122회 중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 일시: 1991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9분 개의

○ 발언자:

- 사와후지 레이지로(澤藤礼次郎)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건설정무차관)
-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국무대신(세무사, 정치가, 중의원 의원, 대장성·농수산성·후생성 장관, 부총리)
- 오가타 가쓰요(緒方克陽)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운수정무차관)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204306X00719911126&spkNum=63¤t=23>

○ 해제(개요 및 특징)

사와후지 의원은 같은 패전국인 독일의 예를 들면서 일본의 무성의한 전후처리를 질타함. 이에 대해 와타나베 외무대신은 일본정부 역시 패전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정부 간 교섭으로 대응해왔다는 점을 강조함. 오가타 의원은 말로만 그치는 일본의 아시아 우호 관계를 질타하면서, 특히 중군위안부는 구체적인 통계도 있는데 정부가 부인하는 점을 크게 개탄함.

○ 주요 내용 번역

- ▷ 사와후지 위원 “(전략) 전후 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책임을 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대신의 답변에서 ‘말로만 해서는 안 돼. 태도로 보여야 해’라고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 ▷ 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 “그것은 조금 전 질문에 있었다시피 어느 단계부터 생각해야 할까요. 역시 메이지(明治) 중반부터 시작된 대륙정책부터 생각하면 좋을 까 생각합니다만, 희생되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준 분들, 전쟁이 끝날 때까지요.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사와후지 위원 “바이츠제커¹⁾의 연설에 대해서는 전부 읽어보신 후에 질문한 것 일테니, 더 구체적으로 총리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혹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대

1) 바이츠제커(Richard von Weizsäcker, 1920~2015) : 독일의 정치가. 1984년 대통령에 선출되어 1989년 재선을 통해 1994년까지 역임. 서독의 콜 총리와 함께 1990년 독일 통일을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함.

상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언급했던 강제연행된 사람들, 노동력으로서, **위안부**로서 말입니다. (중략)

아무래도 독일의 예를 들게 되지만, 이는 역시 필연성도 있는 것입니다. 패전국이지만 다른 국토 혹은 민족에 엄청난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한 독일이 군인과 민간인을 차별하지 않는 원호(援護), 연방원호법으로 전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신생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조치도 하고 있는 룩셈부르크협정, 그리고 이는 독일 통일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2개국과 나치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포괄협정이라고 부릅니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에 필요한 금액은 7조 엔에 이른다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볼 때, 일본은 이러쿵저러쿵 말은 하면서도 보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소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태로.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실 수 있는 고령자들이, 지금 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괴로워서 도저히 자신의 일을 밝힐 수 없었던 **위안부**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지, 이것은 철학적 관점에서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와타나베 국무대신** “전후 일본도 잿더미가 되어 재정 사정이 매우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상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역대 정부는 성의를 가지고 각각의 국가들과 교섭하여 합의하고, 그래서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또 배상을 포기할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개개인과 일본정부가 교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므로, 그것은 상대국 정부의 책임으로 결론을 짓는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여러 사정이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정부 간 교섭에 의한 타결 방식으로 일단은 그런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해석을 취해왔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일본이 밀어붙인 게 아니라 쌍방이 여러 번 협의를 거듭한 결과, 각각 타결해왔다는 현실도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와후지 위원** “부분적인 보상의 실행, 혹은 외교문서로 이것은 이제 보상은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식의 합의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독일처럼 나치 강제노동을 보상하기 위한 폴란드와의 보상금 협정도 체결되었다는, 각서가 교환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착착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도 조금 전에 언급했어요. 이런 차이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노태우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프랑스, 독일, 영국은 정말로 과거의 잘못을 확실하게 씻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식민지로서의 한국, 식민지였던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양 국민은 불행했던 과거를 바라보는 인식과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응어리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이쪽은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이미 결론도 다 난 것으로 생각해도 중요한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인식에 대해 아까부터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슬픈 생각이 드는군요. (중략)”

- ▷ **오가타 위원** “(전략) 이러한 단계에서 한국 대통령의 요구도 있었습시다만, 강제연행자에 관한 명부 등을 넘겨달라는 것에 대해, 작년이었던가요, 8만 명 정도의 명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면밀히 조사해보니 이는 노동성의 과장이 현(縣)의 직업안전과장에게 통달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아시아 인근 국가들을 확실히 고려해야 한다. 명부 등도 내줄 것은 내주어야 한다.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정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군위안부 문제는, 『특고월보』 등에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로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정부의 태도입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반대여서 아시아의 이웃 사람들을 고려하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